

##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 1. 우리나라 입양실태

- 우리나라 국내입양은 국외입양보다 7.8%p 초과하였으나, 이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에 근거한 국외입양 감소에서 오는 영향이며,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에 근거한 입양 기피 문화, 제한적·선별적인 입양행태, 입양 관련 법·제도 미흡, 입양 관련 인프라의 미흡 그리고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부재 등으로 국내입양은 양적·질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수용성 제고, 입양사각지대 아동의 입양 제도권 유입,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욕구 중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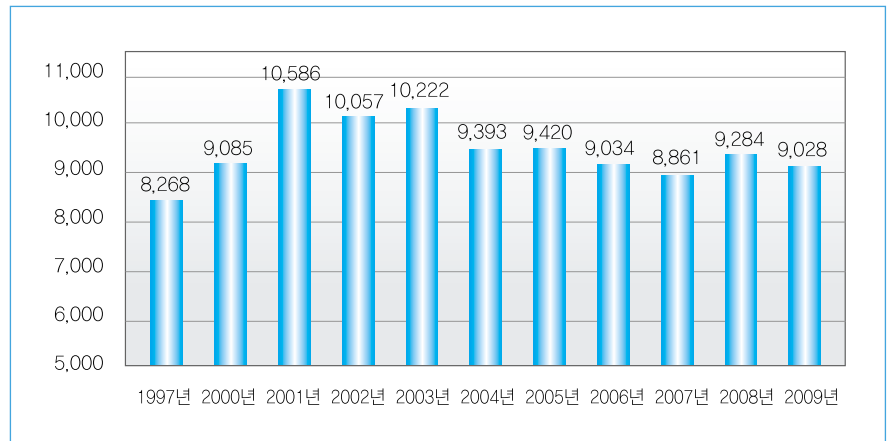
#### □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 및 보호형태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는 1997~2009년 동안 9.2%의 증가율을 보임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발생 규모는 1997년 IMF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다소 감소하였고, 2007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증가추세로 돌아섬

[그림 1]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발생규모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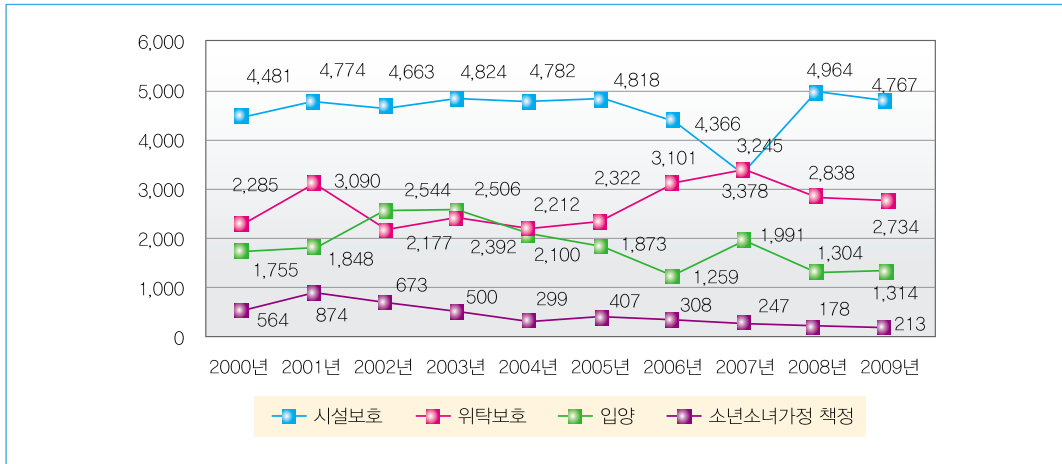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보호형태는 2000~2009년 동안 가정보호는 감소하고 시설보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보호 중 위탁보호가 입양보다 2~3배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위탁보호가 입양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입양자체도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요보호아동의 자질 측면에 문제점을 내포함

[그림 2]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보호형태 변화 추이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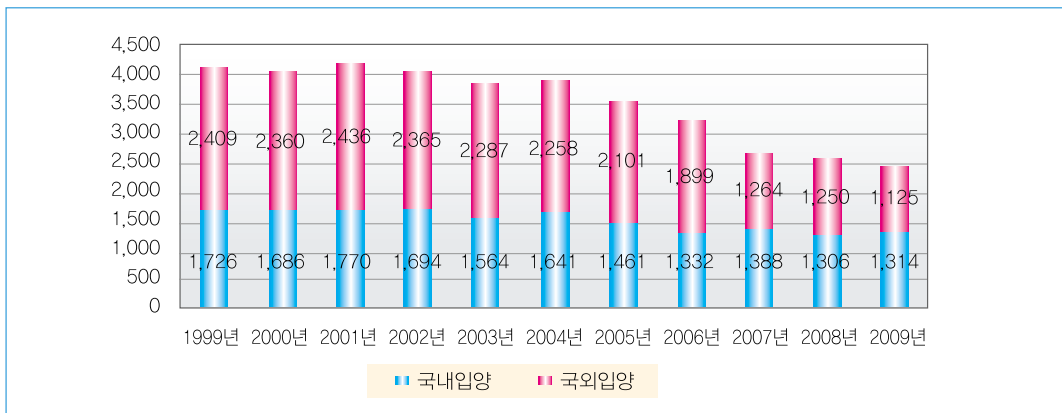
### □ 국내외 입양추이

○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입양은 1998년 이전에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2.5배 높은 수준을 보이다, 1999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입양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9년 국내입양은 국외보다 7.8%p 높아짐

- 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계획’<sup>1)</sup>을 발표하여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국외입양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입양 우선추진제<sup>2)</sup>를 실시함
- 그럼에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과한 것은 절대적인 국내입양의 양적 증가보다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에 근거한 국외입양의 감소에서 오는 영향으로 국내 입양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3] 연도별 국내외입양 추이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1) 정부는 1976년, 1989년에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중단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1994년에 국외입양중단 정책을 철회하였고, 1997년에 다시 국외입양전면중단을 발표하였으나, IMF 위기가 발생하여 국외입양중단 정책은 사실상 철회됨  
 2)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는 입양대상 아동을 5개월 간 국내 입양 허용 후 실패할 경우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제도임

## □ 국외입양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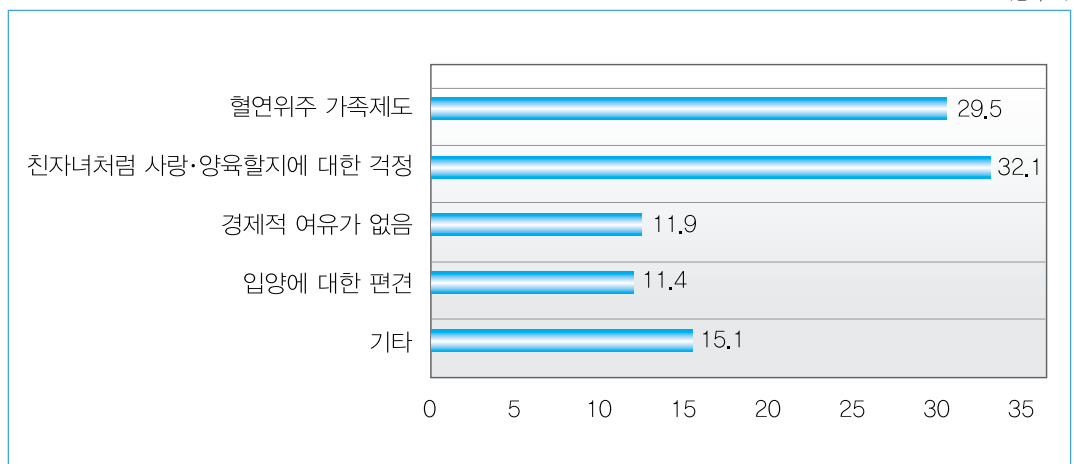
- 저출산시대에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은 아동인구의 양적 감소를 의미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회피로 국제사회에서 불명예를 야기함
- 국외입양은 입양아동의 인권, 타문화와 새로운 가족과의 적응과 갈등 문제, 개인·가족·민족의 정체성 등의 문제를 발생함<sup>3)</sup>
  - 국외입양은 자아정체감의 혼돈, 친생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실감 및 입양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가족, 또래집단 및 지역사회에서 부적응을 유발함

## □ 국내입양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이 지배적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고, 양육 및 경제 등 입양부담으로 인하여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함
  -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기피요인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국민의 입양수용성은 85.5%로 높은 편이나<sup>4)</sup> 가정환경 및 경제적 부담으로 국내입양이 저조함

[그림 4] 우리나라 국민이 입양을 기피하는 이유

(단위: %)



주: 일반국민의 분석대상수는 1,000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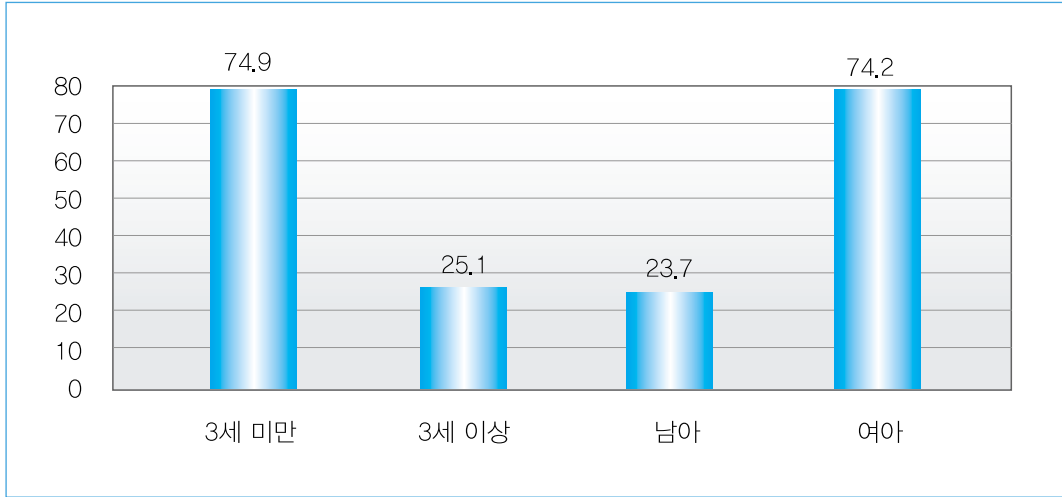
- 국내입양은 아동의 이익·욕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성별, 건강상태, 연령 조건을 중심으로 제한적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 등은 입양의 사각지대에 놓임
  -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입양아동의 선호도는 3세 미만의 여아에 집중되며, 남아·연장아동·장애아동의 입양의향은 12.5~33.6%로 상당히 저조함
  - 실제로 입양가족이 고려한 입양아동조건도 건강, 성별 및 연령이 88.3%를 차지하며, 남아·연장아의 입양의향은 68.7~73.5%로 높으나, 장애아동은 29.4%로 저조한 편임

<sup>3)</sup> 윤택림(2006),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28(1), pp.71-94

<sup>4)</sup>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85.8%이었고, 입양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12.4%, 잘모르겠다는 1.8%로 나타남

[그림 5]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아동의 선호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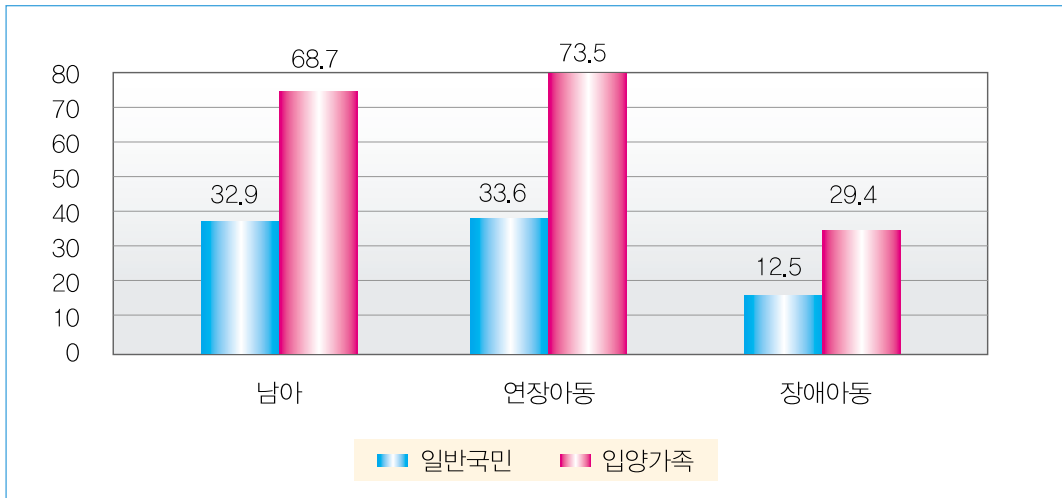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수는 일반국민 1,000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6] 우리나라 국민과 입양가족의 입양의향 비교

(단위: %)



주: 일반국민의 분석대상수는 1,000명, 입양가족의 분석대상수는 137명임

자료: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권의 보호 차원의 입양관련 법·제도 구축이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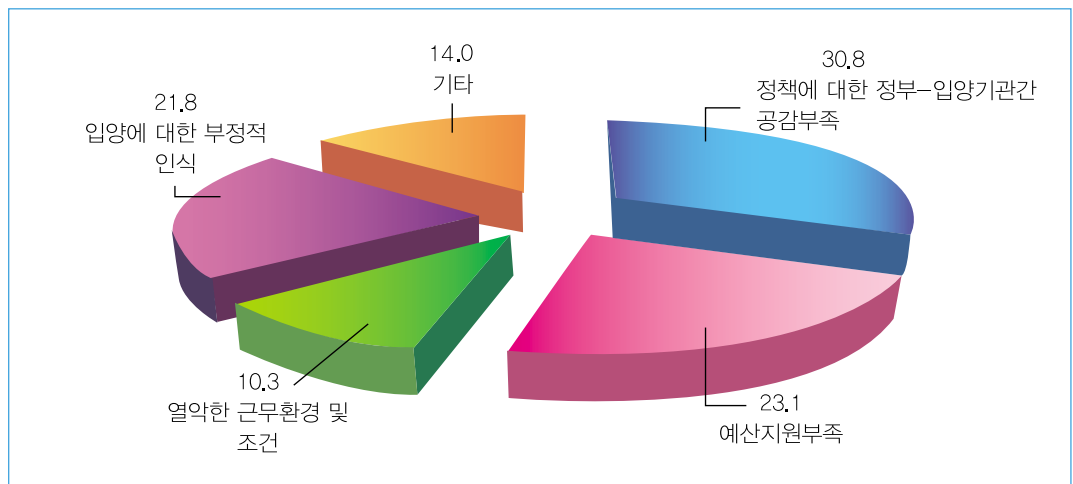
- 현행 입양제도는 입양부모가 관련 서류를 입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데, 이러한 신고제에 근거한 입양제도는 입양부모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아동보호에 취약성을 드러냄
  - 입양부모의 연령, 재산, 양자에 대한 의무사항, 장애여부, 직업 등 다양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입양부모의 범죄력 특히 성범죄 및 폭력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장치가 미흡함

- 또한, 입양시 친부모, 직계존속,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불분명하며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후 취소에 대한 조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친생부모의 법적인 양육권 보장이 불가능함
  - 입양아동의 동의 연령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최근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를 반영하지 않음

- 입양관련 인프라의 질적 미흡으로 입양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이 떨어짐
  -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안정적인 입양사업 수행이 어려우며, 입양기관 실무자의 전문성도 다소 부족한 상황임
    -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지원 부족이 많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기관에 필요한 지원으로 예산지원 확대가 높게 나타나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잘 반영함<sup>5)</sup>

[그림 7] 입양기관의 국내입양업무수행상의 어려움

(단위: %)



주: 입양기관 실무자의 분석대상수는 79명임

자료: 김유경 · 변미희 · 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입양기관 실무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참여도와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욕구가 높아서 입양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함
-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아동, 입양부모의 특성 및 파악현황 등 입양자료가 DB화 되지 않아서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력 및 서비스 수행에 효율성이 떨어짐

-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sup>6)</sup>의 부재로 입양아동의 가정적응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follow-up이 미흡하여 아동인구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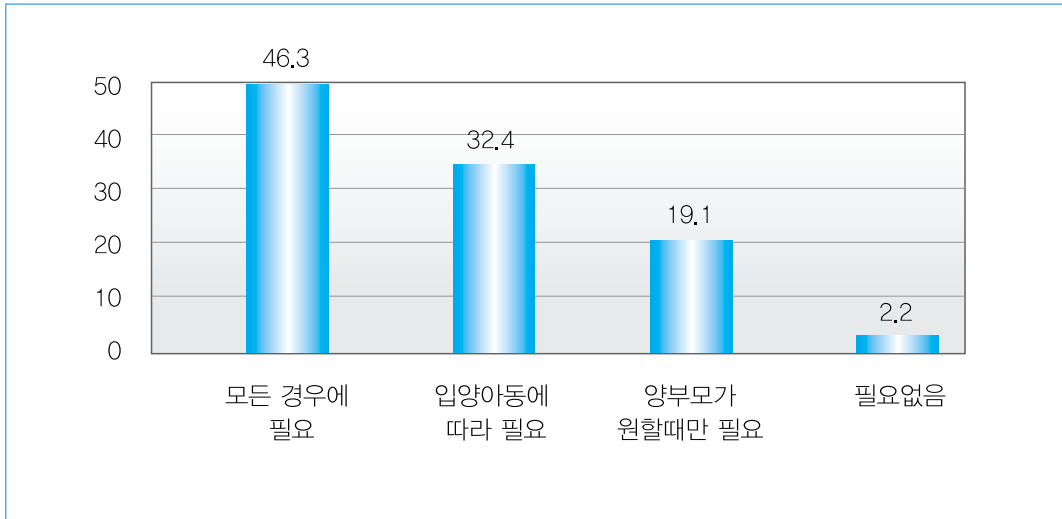
<sup>5)</sup> 현 입양기관은 물가상승률과 입양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2001년에 산정된 입양비용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sup>6)</sup> 사후관리란 입양전문가가 입양이 된 후에 입양가정에서의 입양아의 적응상태를 도와주며 입양아동의 복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 현 사후관리서비스는 6개월에 불과하며 입양가족의 사후관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 입양가족의 사후관리 필요도는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입양아동에 따라 또는 입양부모가 원할 때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음

[그림 8] 입양가족의 사후관리서비스 필요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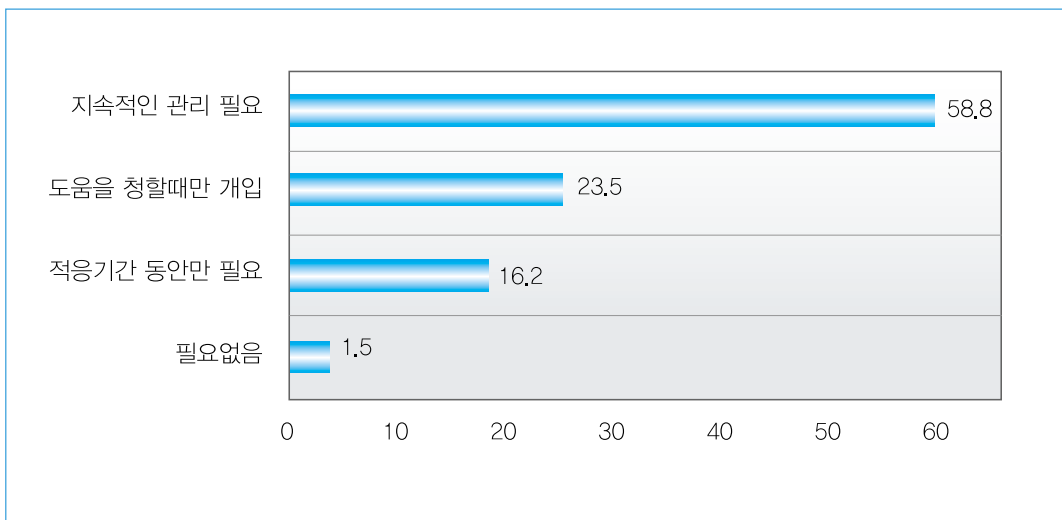
주: 입양가족의 분석대상수는 137명임

자료: 김유경 · 변미희 · 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또한, 현 사후관리기간에 대해 입양가족의 49.6%가 불만족을 보였고, 희망하는 사후관리방식은 과반수 이상이 지속적인 관리를 희망하였고, 나머지는 선택적 사후관리서비스와 입양 후 적응기간 동안만 사후관리서비스를 희망함

[그림 9] 입양가족의 희망하는 사후관리방식

(단위: %)



주: 입양가족의 분석대상수는 137명임

자료: 김유경 · 변미희 · 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정책과제

### □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수용성 제고

- 생애주기단계별로 교육기관 중심의 입양교육과 홍보 실시
  - 유아교육기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단계별로 각 교육기관에서 입양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체계화
  - 정규 교육과정에 입양은 제2의 출산이고 입양가족은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입양관련 콘텐츠 포함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지속적 실시
  -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특히 아동복지기관과 단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보건의료인 등 요보호아동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 강화
- 일반국민 대상의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 인터넷 사이트, TV·신문·라디오 및 간행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

### □ 입양사각지대 아동의 입양 제도권 유입

- 국내입양이 어려운 연장아동, 장애아동 등을 입양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입양기관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대
  - 입양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예비입양부모의 교육 강화
  - 입양아동의 의료비·양육수당·보육료 등의 지원 확대

### □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욕구 중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필요
    - 입양아동이 배치된 지 3개월 이후에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조사한 입양아동 적응보고서와 함께 입양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청구하면 판결하는 시스템 도입
- 입양부모 자격 조건의 강화
  -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입양부모자격에 범죄력을 명시하고 입양부모의 범죄 특히 성범죄 및 폭력범죄,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시스템 도입
- 입양동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강화
  - 입양동의 조항에 친부모가 입양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 친생부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하여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출산 후 15일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며, 입양 동의 후 30일 이내에는 입양동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입양아동의 동의 연령 하향 조정으로 아동권리 강화

○입양인프라의 질적 제고

- 입양기관간 재정 형평성 제고 및 재정 확대
  - 국내입양 아동수의 차이 감안 및 입양수수료의 일원화된 기준설정으로 입양기관간 재정 불평등 해소
  - 물가상승률과 입양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지원 확대
- 입양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 입양실무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이론 및 임상 필수교육 실시
  - 교육 내용은 입양실무자의 욕구를 반영한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콘텐츠 강화
  - 기관통합적인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입양실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고 신규 인력의 교육·훈련 과정에 활용

□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확대

○사후관리서비스 기간 확대

- 입양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상담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 필요
  - 현행 6개월의 사후관리기간을 아동의 정체감 확립시기인 청소년기까지로 연장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 사후관리서비스는 입양가족의 욕구가 높은 정보제공,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교육, 입양부모상담 그리고 입양자녀와의 의사소통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김유경(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23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